주간건설 Review

532호 2018.4.27(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두산중공업, '나눔으로 하나되는' 봉사활동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나사렛대 특강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 동향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법안 국무회의 통과
-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마련 추진
-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강요 금지법안 의원 입법발의

◈ 두산중공업, '나눔으로 하나되는' 봉사활동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가구를 만드는 김명우 사장(왼쪽 두번째)와 안상수 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

○ 4월25일 두산중공업 임직원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가구만들기 일일 공방' 등의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두산인 봉사의 날)'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쳤음

○ '행복을 담는 가구 만들기'와 'Clean 창원, with 두산'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명우 두산중공업 사장과 진한용 노조 지회장을 비롯해 창원시장 안상수 시장과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 회사 사회봉사단 등 1500여 명이 대거 참여하였음

○ 특히 두산중공업은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동동 일대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복을 담는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음

○ 두산중공업 임직원들은 창원시 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교구수납장 등 120여 개 가구를 직접 만들어 기증하였음

○ 두산중공업은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봉산마을에서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클린하우스' 등의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쳤음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나사렛대 특강

○ 4월23일 나사렛대학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초청해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하였음

○ 나사렛대에 따르면 'CEO의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300여명의 교직원

이 참석하였음



나사렛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봉관 회장

○ 이봉관 회장은 특강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선택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셨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고 계획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돕고 역사 하실 것” 이라고 말했음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지난 3월14일 나사렛대학교에서 명예 재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음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 동향

○ 주택분야 대표 공기업인 LH와 SH 등이 공공건설 부문에서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다수의 건설사들이 이들 공기업의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에 주목하면서 미래형 건축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전망

<주요내용>

❒ **제로에너지 아파트란?**

- 제로에너지아파트란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은 최소화하고, 패시브(Passive)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의 단열성, 기밀성 등을 최대로 높이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의미

❒ **주요 공기업 추진 현황**

- LH는 탈원전, 탈화석에너지 등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5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을 현재 준비 중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토부와 방향성은 같이 하되 LH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아파트를 100%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 올해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5개 단지에 총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서울 공릉 행복주택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바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60가구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도 조성
-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해 이를 2025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LH는 제로에너지주택 로드맵 설정을 포함한 'LH 친환경·미래에너지 전략수립 및 신사업 발굴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음
- 용역 사업자 선정 후 5개월간 과업을 진행하면 늦어도 연말께는 로드맵도 베일을 벗게 될 전망

- SH공사 역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인 추정금액 1100억원 안팎의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를 내달 발주할 예정이어서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을 본격화 하고 있음
- 동 발주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국내 제로에너지 관련 기술·공법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

❒ 전망

-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의 관건은 적정공사비 확보가 될 전망
- LH가 최초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ESS 등 제로에너지 관련 설비와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한 단지는 '서울 공릉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100가구)로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예가 대비 85.5%인 61억원 수준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
- 결과적으로 동 공사의 낙찰률은 적격심사제 대상공사 중에서는 다소 높았지만, 발주 당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건설업계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건설업계는 LH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은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제로에너지기술이 추가되면 사업성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향후 LH가 내놓을 로드맵에서는 단계별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포함 여부가 관건
- SH공사가 발주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음
- 향후 제로에너지아파트 발주 물량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사 예산 책정이 까다로운 서울시의 특성상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
- 서울시는 발주에 앞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70㎾Wh/㎡·연 미만)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ZEB 4등급 이상(에너지 자립율 40% 이상)을 갖춘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
- SH공사가 구현하려는 제로에너지아파트를 제대로 건설하려면 단위면적(3.3㎡)당 공사비가 최소한 6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평가지만,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 다만, 업계는 그린홈 등 친환경 건축기술이 처음 대두됐던 2000년대 중반 공사비가 최소 100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로에너지 아파트 관련 기술의 대중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4월26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처분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이는 최근 3년간('15~'17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행정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6월5일 限)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제재처분 강화**

-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법안 국무회의 통과

○ 4월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과태료 액수 산정시 고려 요소 일원화**

-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 로 일원화

- 이는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다, 여타 소관 법령과 동일하기 맞추기 위한 조치

❒ **과태료 부과 대상 명확화**

-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음
- 이에 따라, 금번 개정 시행령에 상기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

◈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마련 추진

○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4월20일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함

○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경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9월까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주요 추진내용>

❒ **건설산업 구조 개편**

-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여러 가지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공공사업 효율화**

-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토록 함
-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강요 금지법안 의원 입법발의

○ 4월17일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강요 금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이는 정부 및 주요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해당 건설사가 전가된 비용 보전을 위해 공기 단축 또는 저가의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개정안 주요내용>

❒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부당특약 등 설정시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 허용**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